노동운동의 활로—생산계의 민주화

강연초록—한국에서 생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제조건

이번 강연은 지난 10월 고대에서 개최된 학단협 연합 심포지움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발표문은 김형기(경북대·경제학)교수의 글로써 그는 현 노동운동을 '구조적 위기'로 파악하였다. 이 시각은 노동진영과 학계에서 많은 비판과 호응을 받아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번 학단협 심포지움에서도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다. 〈편집자 註〉

한국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자관계의 민주화는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 붕괴, 노동운동이념의 혼란, 신보수주의적 경향 등의 외부요인과 축적체제 위기에 따른 국민경제의 위기, 노동계급 내부구성의 복잡화 와 이질화, 개인주의적 성향등의 내부요인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한국노동운동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간의 노조운동이 단순한 전투적 경제투쟁이나 권력에 대한 방어적 투쟁에 매몰되어 자본의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에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운동의 현장적 토대는 강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산현장의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생산정치'의 개념을 노동운동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생산정치'란 생산 내부에 단순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계기까지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생산정치 실천을 통해 현장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나아가 노동운동은 생산정치의 실현을 통하여 생산정치를 국가정치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의 변혁을 위한 주체로 형성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관계의 민주화, 노동자의 경영참여, 단체 교섭제도, 인사·징계에 대한 노사 동수의 기구 구성 등을 지향하는 것이 생산민주주의이다.

생산정치와 관련된 주요변수로 먼저 자본의 축적체제와 노동통제전략을 들 수 있다.

1987년 이전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는 기술적인 종속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외관상의 노시협조는 강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부모순의 폭발을 87년 운 전략에 착수하게 된다. 공장·사무자동화를 진전시키며, 생산공정을 분할·하청화하고 내부 노동시장을 새로이 체계화·고도화하는 등시에 현행 노동악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새로운 자본의 전략은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결여된 노동운동 진영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 생산관계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본의 통제 전략으로 고립된 노동운동
현장 토대강화로 변혁 주체가 되어야

노동자 대투쟁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은 이전의 강압적 축적체제에 이상을 가져왔고, 그것은 곧 경제위기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자본은 자신의 권력을 재구축하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전략에 대응하여 민주노조는 '사수'하는 방어적 전략을 취하게 되며, 이에 전투성이 강화된 생산정치 구조와 노동자·자본가의 전략이 상승작용하면서 귀결시킨 생산현장의 권력관계는 노자간의 계급투쟁의 제도화된 형태인 단체협약 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최근 노자간의 주요쟁점은 무노동 무임금문제와 인사경영권함가로 집약되며 이중 인사경영권 문제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인사경영권 참가요구는 고용안정과 직장안정 및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방어적 성격임에도 노동자의 인사 및 경영참가를 철저히 배제하는 자본측의 입장과 국가권력이 필차됨으로 인해 노동과 국가간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탄압속에서도 단체교섭 결과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인사경영참가가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본과 정권의 탄압속에서 생산민주주의는 비록 지체되고 있으나 경향적으로 서서히 진전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제 생산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생산정치와 국가정치의 구조적 제약을 개혁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자.

먼저 당면한 경제위기와 생산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축적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경제 관계의 전화 및 노자관계의 전화와 결합되어야 하므로 민주화된 국가 정책의 강제 또한 요구된다.

반독점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제개혁, 환교육을 실현하는 노자관계개혁이라는 3중의 개혁을 통한 고급기술—고생산성—고임금의 확보전략, 이것이 새로운 축적체제의 관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적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노자관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사공동결정제 혹은 노동자 중역제, 작업장 민주주의같은 노동자의 경영참가 등 생산민주주의는 노자관계의 개혁이 현재 노동자들의 강한 요구임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노자관계 개혁방향 설정은 생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산정치의 민주화를 통한 기업권력구조 개혁의 선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자관계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악법 등의 법개정투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적 노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조합 조직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개급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운동은 점체 회복과 새로운 고양을 위한 새로운 전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노조조직을 확대 재편성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적 노조는 극복되어야 하며 조직률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공무원, 사무기술직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꼭 노조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노조의 민주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발전이 중요하다. 민주성의 과잉이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무국 실무는 지도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산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무전문기술직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넷째 물리적 투쟁력과 전투성의 고양으로 일관해온 지금까지의 운동노선을 지양하기 위하여 숙련과 지식을 통한 노동계급의 형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념상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최소강령으로 민주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의 실현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전투적 노조운동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사하고 있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에 따른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전개되고, 노조운동은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정치 현상에 주목하고 생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당면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조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文責: 이수정 記者〉

정책대안까지 확장된 진보적 학술영역

—학단협 연합심포지움 개괄

지난 10일 고려대 대강당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의 제5회 연합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한 학단협은 지난 88년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학계의 민주적개혁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후, 진보적 학술영역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여 왔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 사회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진보적 학술영역이 이론적 주제나 본질분석적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주제로까지 확장되었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의 다양한 이론논쟁으로 인식의 폭을 넓혀왔던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88)' '86년대 한국사회와 지배구조(89)'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90)'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91)'에 이은 이번 심포지움은 인식이 현실의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던 이전의 오류를 극복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학단협 운영위원회는 심포지움에 앞선 기조발제에서 "장보적 학술연구는 권력이나 체제변화의 당위성이나 이념적 주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학적 자세를 배제하고 실질생활영역의 문제점들을 찾아 분석하며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총 12개 주제로 3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1분과에서는 소득분배—독점재벌—토지—주택, 제2분과는 언론—군축—여성—생산민주주의(노동), 제3분과는 교통—사회복지—교육—환경 등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소위 관변단체라 불리우는 정부부처관리, 관련연구소나 심포지움의 발표문에서도 비판된 경실련의 학자들을 토론자로 초청한 이번 심포지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많은 토론을 벌이지는 못했으나 진보학계 토론회의 획기적 시도로 평가된다.

사회전반에 걸친 영역에서의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이번 심포지움의 한계는 각 발표문들의 정책과 대안이 현실 적응능력면에서 뒤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학단협지체내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발표문들은 기존 심포지움의 관례상, 발표회에서 토론이나 논평을 수렴하기 전 단행본('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역사비평사刊)으로 만들어져 미완성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미완성의 정책과 대안이 자신의 정책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여 어떠한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진단과 처방—이정우(경북대교수·경제학)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장상환(경상대교수·경제학) ▲한국 토지정책의 성격과 대안—한도현(서강대 강사) ▲한국 주택문제의 구조와 대안적 전략의 모색—김용창(경상대 강사)

◇제2분과 ▲공공성제고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에 관한 시론—김서중(광주대교수·신방과) ▲냉전제도의 해소와 군축을 위한 분석과 대안—강창수(평화연구소 연구원)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여성 고용을 중심으로—이은영(외대교수·법학) ▲한국에서 생산민주주의 실현의 역사적 전제조건—김형기(경북대교수·경제학)

◇제3분과 ▲한국사회의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지본주의 사회론적시각에서—김현주(한국공간환경연구회연구원) ▲한국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대응-정책대안 제시를 중심으로—이영환(성공회신학대학교사·사회복지학) ▲새 입시제도의 비판과 개선책—강순원(한신대교수·기독교교육학) ▲한국 산업폐기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책—이상헌(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연구원)

〈학술부〉

물새는 지배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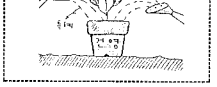
'수서 의혹 사건'의 명백한 진위 규명과 그 응징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사건을 끝내버린 정부는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또다시 제2의·수서 사건을 대면하게 했다.

무소속 손춘영 의원의 국정감사 발표에 의해 드러난 건영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시일이 지나며 확연하게 드러난 그 부정의 범위와 수법은 너무나 교묘하고 부도덕한 것이어서 국민은 기민당한 배신감과 함께 상습적인 정부의 행정조직에 기가 찰 뿐이다.

88년까지만해도 건설업체 도급순위 61위에 머물었으나 지난해 도급순위 25위로 급부상한 (주)건영은 대구 지역에서 사업기반을 둔 전형적인 'TK'기업으로서 서울로 진출해 전국적인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한 우방, 청구주택과 함께 '대구 3인방'의 하나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중소주택업체로 출발한 건영이 이렇게 전국적인 주택건설업체로 급성장하데는 대구·경북(TK) 여권 인사들의 지원이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택건설의 침체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건영은 정부에서 방주하는 지하철, 도로 등의 각종 토목공사를 따내 불황을 타지 않아 매출액 80%의 신장율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 '건영 특혜'의혹 사건에서 드러나는 몇몇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건영사건은 서울시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 기관의 합작품으로 특정업체 즉 건영을 위해 '건설업체의 땀 소유 조합 불허' 규정을 고치거나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15층 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등 관계 법률을 교묘히 바꾼 사실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현재 건영특혜 수사에 난색을 표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이번 사건자체가 여러 행정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터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요즘 그 엄청난 스케일에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누수현상은 우리가 금방 자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조금씩 물줄기가 새어 나오던 것을 어느 순간 뚝을 무너뜨릴 때가 다 되어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혼이를 장권말기에는 행정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한다.

내 일부는 이것으로 끝이야 라는 식의 책임감없는 안일주의에 빠져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얼렁뚱땅 넘긴 일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전에 불량시멘트를 사용했던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건물이 모두 무너져내리고 마는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하늘은 내려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학술정보

민족생활 문화학교 열려 오는 28일부터 향린교회에서

민족생활문화연구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생활문화학교'를 개최한다.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건강한 민족 생활문화운동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민주정권수립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생활문화 대개혁안을 제시하고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강좌는 정책대안제시를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점과 구조적 원인분석, 각 단위에서의 해결방안, 대개혁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식·주, 대중문화, 공중도덕 및 종습 등의 대개혁안의 강의가 있고 맺음강의로서 '대선시기에 있어서 민족생활문화운동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좌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21일부터 이틀간은 수련회가 실시된다.

(문의전화:744-5606, 762-3202)

동북아 학술세미나 북경대학에서 열려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정치·경제발전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북경대학에서 열린다.

3국의 학술교류가 목적인 이 학술세미나는 본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북경대학의 정치학과, 일본대학의 상학부·법학부가 공동참여하여 열리다 개최되고 있다.

본교 교수로는 조장원(아·태연구소장), 박기완(부소장), 강정모(무역학과), 양성철(평화복지대학원)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젊음을 과시하자는 건 아니다.
치기어린 낭만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안간힘을 다해 봄으로써
나의 모든 가능성에 부딪쳐 볼 뿐이다.

한계에 도전하는 의지, 행동하는 젊음—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70여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 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 부문에서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금융, 유통, 환경사업, 정보산업에
이어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 소재 및 세라믹,
발효공업 등 첨단 산업에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 ●한국제당 ●한국제분 ●삼양통상 ●삼양유지사주식회사 ●한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사료주식회사 ●대한설탕공업사 ●신흥주식교환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제넥스개발 ●삼양통합연구소 ●삼양회 ●수남장학회